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12℃ 목포 3/11℃ 여수 5/13℃

단기 4342년 (음력 10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37호 1판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내년 지방선거 표밭은 벌써…

지자체 위장전입 수두룩 단속하자니 눈치없는 짓?

선관위 단속요청 받고 일선공무원들 속앓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한 위장전입 단속을 놓고 담당 직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위장 전입을 방관하자니 직무유기이고, 적극 단속에 나서자니 혹시라도 관련있을지 모를 단체장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5개 구(區)는 지난달 11일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 예방 및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위장전입의 유형과 사례, 단속 기간, 예방 및 홍보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되는 내년 5월 하순 이전까지 전입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단속에 나섰다가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當落)이 결정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전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현역'으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기초단체장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단속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속을 해봤자 단체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심지어 광주 모 구청 전입 담당자는 며칠 전 구청장 주재 회의에서 '위장전입 단속 대책안'을 발표했다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분위기도 모르고 공연한 일을 한다'는 눈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위장전입의 목적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하긴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뜻 단속에 나설 직원이 몇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사위등재 및 허위날인죄)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 180일 전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당비 대납 무더기 입당 무효되나

민주당 광주시당 본인 의사 확인키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당비 대납을 통한 무더기 입당원서 접수 추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무운영 보고를 통해 최근 입당원서를 다량으로 접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당비 대납'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의 입당원서 폭증은 내년 지방선거 당원경선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며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지 않아 차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10여 명에 이르는 입지자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온 터에 입당에 따른 시비가 일 경우 경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기부터 잡음의 여지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입당자를 대상으로 확인을 거친 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 처리된 경우, 일괄적으로 입당 보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광주시당은 무더기 입당원서 제출의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역위원회를 통해 입당원서 다량 접수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최근 입당원서를 100~200장씩 접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당비 대납을 통해 입당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개인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자체 공모한다던 '국제과학비즈 벨트' 세종시 몰아주기

광주 R&D특구 시너지 효과 반감

정부가 전국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하려던 방침을 뒤집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지를 사실상 세종시로 정해 '세종시 몰아주기'에 따른 지역 역차별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 집적단지인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유치해 R&D특구 조성효과를 높이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타 지자체들도 기초과학 인프라 확충 기회마저 상실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3차회의를 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성격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투자규모는 3조5천487억원에 달하며, 200만㎡ 사업부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위한 대형 연구 및 분석 장치인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같은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으로 장기적으로 5개 연구단 3천명 규모로 조성된다.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를 정한 것은 지자체 공모 등 경쟁을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번복한 것이어서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로서는 지난해 4월 민·관으로 구성된 '광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TF팀'을 구성하는 등 취약한 기초과학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말 성명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인 만큼 오로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에 대한 투자나 입지 선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추진논의에 정치적인 고려나 이해관계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 입지 공모 선정 방침을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세종시로 정한 것은 세종시 계획수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달 30일 여수시 여수신항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공식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강동석 박람회조직위원장 등 내외빈들이 사업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정총리 "명품박람회 되게 적극 지원"

여수박람회 기공식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역대 세계박람회에서 가장 성공한 명품 박람회로 치러진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여수신항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공식'에서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남해바다, 그리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명품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9조5천억 원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 등 박람회 주변SOC를 차질없이 확충, 10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800만 명의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박람회 이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후활용에도 성공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동석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기공식사를 통해 "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지 2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의 초석을 닦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여수박람회가 남해안권의 공동발전과 한국의 국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890여 일 남은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여수시민과 전남도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여수시민들은 오늘 기공식을 너무도 기다려왔다"며 "여수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지역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